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중단

도의회 인사청문회서 자료제출 거부·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 지적돼

전북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중단했다. 자료제출 거부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9월 30일 내정된 전북 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에 실시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인사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사기업에 오래 근무해 공익보다는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설회사 근무 경력이 있으나 주택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기업 운영 계획에 대해 물었다. 또한 도내 사회주택, 새만금 태양광사업, 행안부 경영평가 등 공사 경영총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에 심도 있게 진행했다.

위원회는 1차 업무능력 검증을 마친

결과, 후보자가 개발공사 사업 등에 대한 숙지는 물론 관련 정부정책과 추진사업도 답변하지 못하는 등 준비성이 부족했으며,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대안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정확한 인사 검증을 위해 청문위원회가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요구한 도덕성 검증 관련 주

기자료를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위원회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병도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위원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철저한 검증을 위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경수 기자

민주 "예방 가능했던 참사"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 본부 차원에서 오늘 참사 발생 현장 방문키로"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정부, 경찰당국이 많은 인파가 결집할 것을 예상했던 만큼 얼마든지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참사라고 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현장도 방문하기로 했다.



하는 등의 실무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배치돼 있음에도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의 심리적 부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중상자도 현재 33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도 추가적인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지원이나 심리지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있다. 피해 대응 현황, 결과를 정부로부터 먼저 듣고 차후에 원인 분석 등이 이뤄지면 빠르게 현안질의를 마련될 예정"이라며 "대책본부 차원에서는 내일 오후 이태원 사고 발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본부장)을 필두로 12명의 의원이 참여한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뉴스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세계적, 범국민적 충격이자 슬픔이 발생한 만큼 저의 운영 목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습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생활안전점검이나 장애비용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 등에 있어서 유가족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장례비 지원에 있어서 가족들이 일일이 10여개에 달하는 항목의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북도·도의회 추모 발걸음
장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공영장 1층에 마련된 가운데 국무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효력 연장되나

민주 안호영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출 "지역농협 김치 학교급식 납품 위해 특례조항 효력 연장 필요"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학교급식 납품에 지역농협을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납품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특례조항은 올해 말 유효기

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은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000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급식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서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 주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2일간의 제 2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상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 표하며, 1차 분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고항·망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롯한 35건의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사업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조남석 의원),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이종현 의원) 등이다.

분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손진영 의원)을 채택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강태창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이 "전라북도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군·구청·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초·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도 소방시설·소방용수 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태창 의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갈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는 지나쳐도 좋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